

## 공공요금 결정방식 변경 검토

### 총괄원가방식 없애고 가격상한규제등 도입

생산에 들어간 원가에 따라 요금을 정해 온 공공요금 결정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재경경제부는 1일 전기·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현행 공공요금의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Price Cap)'나 '잣대규제(Yard Stick)',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등 다양한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 의무를 부과한 뒤 3~5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에서 기업별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여러 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야드 스틱' 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도 도입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1·4분기 중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4분기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매일, 2001. 2. 2(금)]

## 市政상식도 알고 상금도 타고

### 서울시 직원대상 시정 상식 공모

'시정 상식도 알고, 용돈도 챙기고'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상식을 공모하고 나섰다. 시 직원 누구나 알아야 할 시정상식을 공유함으로써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하고 시정 홍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정 상식을 공모,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은 각 과별 소관업무 등 시 직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상식이다. 1인당 응모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자체 전산망을 통하거나 인사행정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1개월 단위로 예비심사를 하고 4월중에 본심사를 거쳐 시정상식 100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심 통과는 1만원, 본선 통과는 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대한매일, 2001. 1. 18(목)]